


<b>보도자료</b> 2021. 6. 8.	 <b>양형위원회</b>	
	문의	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(☎ 02-3480-1924)

## 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·수정 대상 범죄군, 주제 등 선정

- 『아동학대범죄』 양형기준을 수정하고, 『벌금형 양형기준 설정』 작업을 추진
- 『합의 관련 양형요소』를 정비하여, 각 범죄군 양형기준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(처벌불원, 상당 금액 공탁 등)의 통일적·체계적 기준 정립 도모
- 범죄 발생의 빈도 수,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『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』(정보통신 기기 해킹,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등 범죄)와 『관세법위반범죄』의 양형기준 설정 추진
- 성범죄(군형법상 성범죄 포함)의 경우 최근 법률 개정이 있었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축적된 양형실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 양형기준의 수정 추진

양형위원회(위원장 김영란)는 2021. 6. 7. 15:3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, 수정 관련 추진 업무를 선정함

### ①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·수정 관련 업무

#### 1-1.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

## ○ 착수 배경

-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① 형의 종류 선택 및 ② 형량 산정 시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
- 제8기 양형위원회는 현재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상황,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관계기관과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,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함

## ○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계획

-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,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(2021. 4.~2022. 4.)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, 후반기(2022. 4.~2023. 4.)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함
  -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방안으로는 ① 징역(금고)형과 벌금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, ②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, ③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하고, 각각의 경우에 ㉠ 전체 범죄군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, ㉡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,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설정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
  -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범죄는 구공판 기소되고 합의부에서 재판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기준의 적용(유형 분류, 양형인자 등)에 관하여 충분한 법정공방이 가능함. 그런데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약식 사건(벌금형은 약식명령 70~80%, 판결 20~30%로 약식명령이 다수를 차지함)에도 적용한다면 구약식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실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,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소 방식(구약식 기소인지 구공판 기소인지)에 따라 벌금형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

-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경우,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제,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함
-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고, 설정 방안에 따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비롯한 방대한 조사 역시 필요함

## 1-2.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

### ○ 착수 배경

-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·수정해 온 결과 유사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체계적·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
-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,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·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

### ○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계획

- 현행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관한 규정(정의규정의 내용 반영)은 ① 처벌불원, ② 처벌불원 및 상당한 보상, ③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합의에 준하는 상당액 공탁, ④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, ⑤ 상당부분 피해회복, ⑥ 상당금액 공탁, ⑦ 일부 피해회복 등으로 다양하고, 그 질적 구분(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 등)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
-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(2021. 4.~2022. 4.)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본 원칙을 의결한 후, 그에 따라 각 범죄군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

## ②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

### ○ 선정 기준

- 국민의 관심도, 범죄 발생 빈도,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, 양

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(양형이 특히 어려운 유형의 범죄 또는 실무에서 양형기준 설정의 요청이 있는 범죄) 등 종합적 고려

### ○ 특징

-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, 관세법위반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
-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8기 양형위원회 설정 대상 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.39%이고,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2.11%임 (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, 관세법위반범죄)

### ○ 선정된 대상 범죄군

#### ■ 2-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

- PC와 인터넷,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,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해킹,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거래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,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음
-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낮은 편이 아니며[2006~2008년 584건(0.14%) ➡ 2011~2020년 4,037건(0.25%)], 징역형 비율(71.04%)도 높은 편임

#### ■ 2-2 관세법위반범죄

- 밀수출입, 관세포탈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, 사회 지도층 탈세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음
-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할 필요가 있음
- 발생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낮은 편이 아니며[2006~2008년 1,028건(0.25%) ➡ 2011~2020년 2,444건(0.15%)], 징역형 비율(70.34%)도 높은 편임

## ③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

### ○ 선정 기준

- 현행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, 양형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법령 반영,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실무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

## ○ 선정된 대상 범죄군

### ■ 3-1 아동학대범죄
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상당함: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,500여 건으로,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함
-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함.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여부, 유형의 재분류 여부,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여부, 양형인자의 정비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
-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 2021. 6. 21.(월) 「아동학대범죄와 양형」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예정임. 양형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### ■ 3-2 교통범죄

-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, 2회 이상 음주 또는 0.2% 이상 음주운전에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의 법정형 하한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된 상황임
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설정범위에 포함할지 여부,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할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

### ■ 3-3 성범죄

- 개정법률 반영: 성범죄 양형기준은 각각의 대유형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유형을 분류함. 그런데 형법 개정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됨. 13세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-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양형실무 등 반영: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실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현행 양

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

- 20. 5. 18. 추가된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미비점도 함께 검토하여, 군 내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반영

#### 4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, 수정 업무 추진 방식 및 시기

##### ○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, 시행

-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,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(2021. 4. 27.~2022. 4. 26.)와 후반기(2022. 4. 27.~2023. 4. 26.)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, 시행키로 함
- 전반기에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1-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 결정, 1-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, 3-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, 3-3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
- 후반기에 구체적인 범죄군 대상 1-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 완료, 2-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, 2-2 관세법위반범죄의 각 양형기준 설정 작업, 3-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

※ 현재의 코로나-19 상황으로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수반되는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, 양형기준 설정 작업은 후반기에 추진

#### [참고] 양형기준 설정, 수정 절차

단 계	담당	내 용
1	양형기준 초안 작성	전문위원
		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
		↓
2	양형기준안 의결	위원회 소위원회
		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
		↓
3	공청회 및 의견조회	위원회
		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

			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치 절차를 진행
		↓	
4	양형기준안 수정	위원회 소위원회	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
		↓	
5	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	위원회	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

## 5 향후 일정

### ○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, 수정 작업 추진

-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 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, 수정 관련 업무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: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범위, 내용 검토

### ○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「아동학대범죄와 양형」 개최

- 일시 : 2021. 6. 21.(월) 14:00 ~ 18:00
- 장소 : 대법원 1층 대강당
- 방청 :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중계 시청

※ 기술상 제약으로 사전 접수[접수 기간: 2021. 6. 7.(월) ~ 6. 11.(금)]를 하여야 방청 가능 / 방청 접수 방법 등 안내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'공지사항'란 참조

### ○ 다음 양형위원회 111차 회의는 2021. 8. 16.(월) 오후 개최 예정

- 안건: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